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4/ 10/ 23 통권 1698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법인세 공제감면 주요 사례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리스크 관리기준 : 실무 사례
-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해외여행은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법인세 공제감면 주요 사례
- 비거주자 원천징수
-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직접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 지급시 해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과세 대상소득 아님

(p.13)

전직원 화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중앙통합경영과각팀 분산경영 비교〉

개념구분	중앙통합경영	팀별 분산경영
목적	기업 내부자원 효율적 관리로 경쟁력 향상, 조직의 통제력 강화, 일관된 방향으로 효율 극대화	독립적 운영 속에 전체의 조화 조직의 유연성과 혁신능력 향상
의사결정 권한	전략, 예산, 인사 등 주요 결정은 중앙본부 독점	각 부서, 팀, 각자에 권한 위임
자율운영범위	분산데이터의 중앙관리 통합·분석, 의사결정	각 부서, 해외지사, 지방부서 독립 운영
조직운영단위	중복부서나 기능 통합, 조직구조 재설계로 효율성을 높임	조직이 팀(셀)단위로 목표 설정, 자원관리, 결과 달성
프로젝트 운영	보고·재무·품질 등 프로세스 표준화, 중복작업 축소	특정 과제 중심 프로젝트 팀 구성
데이터 정보 공유	제조·판매·인사의 ERP통합시스템으로 관리	중앙서버, 클라우드 기반 DB구축, 실시간 공유, 정보접근 가능
보상체계	채용·교육·승진 등 중앙관리와, 조직 전체의 성과이익배분, 공동측정 시스템	각 팀 성과에 따른 보상 차등지급, 각 팀 독립적으로 높은 성과 달성
교육훈련방법	중앙집중인사교육, 승진, 인재교환, 순환보직 등	각 팀 리더와 직원의 분산 경영능력 교육 등
문제점 해결	문제발생별로 중앙조직 개입 해결	각 팀이 현장에서 문제 해결, 권한 부여
고객서비스	중앙의 고객중심 관리 중앙통제(CRM) 경영	각 팀의 고객서비스 권한 있음. customizing 권한 제공
중앙, 팀별 피드백	중앙이 현장업무 결정, 지속성 개선과 인수합병(M&A) 전략 실행(상하)	현장업무가 중앙에 신속파악전달(하상)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박윤종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 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98호 / 주간 43호

2024. 10. 23.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중앙 통합경영과 각 팀 분산 경영 비교	표지
CEO의 경영 산책	리스크 관리기준·실무 사례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증권계좌 계정과목 - 매입/매출 부가세 신고 시점 차이에 대한 문의 - 회계프로그램 제품은 반드시 자산등록해야하나요? - 소비자 보상금 지급 시 증빙 문의	5 6
눈에맞는 절세미인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해외여행은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7
매일 절세 재무요점	-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절세 상품 - 상속세 신고 주요 절차	9 10
직장인Survival	아무리 진부한 대답이라도 하라	11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서부 터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 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시 사업자가 아 닌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용역 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사전법규부가-256, 2024.04.25)	12 13
세정뉴스와 해설	미술품으로 상속세 물납, 첫 사례 나왔다... 이만일 일출도 등 4점 허용	14
마케팅 Tax consulting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직접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 지급시 해외원천 소득이므로 국내과세 대상소득 아님	13
세무정보	- 법인세 공제감면 주요 사례 - 비거주자 원천징수	15 34
경영정보	-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45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 정환율	33

리스크 관리기준 : 실무 사례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중소기업 등의 리스크 관리 체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리스크 환경분석에 이어
리스크 관리 기준(risk management criteria)의 설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리스크 관리 기준은 앞에서 실시한 기업의 환경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리스크 관리 기준은 모든 임직원이 리스크 관리를 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리스크 관리의 목적
- ② 리스크 관리 방향
- ③ 기대효과
- ④ 리스크의 정의
- ⑤ 리스크 관리 조직 및 담당자
- ⑥ 리스크 관리 조직 및 담당자별 역할
- ⑦ 리스크 관리 절차(리스크 인식, 리스크 분석, 등급 분류 등)
- ⑧ 리스크 통제 활동 등

실무적 이해를 위해 국제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에 체계화된 영국 A 지방자치단체의 리스크 관리기준을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City Council은 Turnbull Guidance¹⁾ 및 호주/뉴질랜드의 리스크 관리 기준²⁾ 등에 의거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³⁾.

- 1) 1999년 영국에서 런던증권거래소(LSE)에 상장된 기업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보고서로 2018. 7월 The UK Corporate Governance Code로 통합
- 2) AS/NZS 4360:2004-Risk Management 1999년 제정된 호주/뉴질랜드 리스크 관리 기준(AS/NZS 4360:2004-Risk Management로 개정)은 세계 최초로 리스크 관리를 제도화한 것으로서 영미권 국가에서 이를 널리 받아들였음)
- 3) 강기승, 리스크 관리의 실제, 2024. 9. pp. 56-58. 분석 요약 인용함.

가. 리스크관리 전략의 목적

- 조직 문화와 대내외 업무 수행에 리스크 관리 마인드 정착
- 직원 및 계약 거래처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Best practices에 따른 리스크 관리
- 사회적, 환경적, 법적 요구의 변화를 예상하고 이에 대응
-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부상, 피해, 손실 및 불편을 최소화
- 조직의 신뢰도, 평판 및 보유 자산 등을 보호

나. 리스크관리 방향

- 리스크관리의 역할, 책임 및 보고라인의 명확한 설정
- 직원들이 리스크관리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리스크 개념에 입각한 의사결정,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업무수행
- 정기적으로 리스크관리 및 통제활동 운용상황을 모니터링

다. 기대 효과

- 경영자가 리스크 현실화되는 것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더 나은 의사결정을 통하여 조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
- 보유자원의 활용 및 주요업무 수행의 적정성 제고
-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신뢰성 및 책임성의 증진
- 리스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리스크관리 방법 개선을 통한 효과적인 통제(control) 환경의 구축

리스크 정의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업무분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리스크의 정의

- 리스크(Risk): 조직의 목표와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보건, 안전, 신뢰도, 법령, 재무, 영업, 전략 등의 리스크)
-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 리스크의 인식, 평가, 우선순위 결정, 리스크 감축방안 실행 및 리스크관리 상황에 대한 검토
- 리스크 등록부(Risk Register): 인식된 개별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기록한 목록표

나. 리스크관리 담당자

- 최고 경영층(Elected Members)
리스크 관리전략에 대한 최종 승인, 동 전략수행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 등 리스크관리 정책에

관한 최종 감독. 예산편성은 리스크를 반영하여 의사결정

- 간부회의(Management Board)
 - 각부서 국장들로 구성되는 정책결정기관으로 리스크관리 실무 총괄 및 리스크관리 실무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짐. 정기적으로 리스크 등록부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취함
 - 재무/IT 국장은 리스크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 소관업무별 리스크관리에 대한 책임.
- 각 부서(Directorate Management Teams)
 - 리스크 평가 수행 및 주요 리스크 관리, 분기별로 부서별 리스크 등록부 내용을 검토하고 새로운 리스크 요인을 반영하여 리스크관리그룹(Risk Management Group)에 보고
- 리스크관리그룹(Risk Management Group)
 - 리스크전략 수행에 대한 분기별 모니터링, 검토 및 임원회의에 보고
 - 리스크관리 부서의 전문직원과 각부서 리스크관리 담당자로 구성
- 리스크관리 총책임자(Risk and Insurance Manager)
 - 리스크관리 실무를 총괄. 리스크관리업무 지원, 조언 및 교육 및 연수 실시
 - 각 부서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조언 및 모니터링. 분기별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리스크 관리 상황 보고, 리스크 등록부를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관리
- 리스크 담당자(Risk Owners)
 - 지정된 리스크에 대한 적시 조치. 담당 책임자, 리스크관리그룹에 리스크관리상황을 보고
- 감사실(Internal Audit)
 - 리스크관리 전략의 이행 여부 및 그 적정성을 감사
- 실무 책임자(Service Managers)
 - 담당 업무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책임

동 기관의 리스크 관리 조직을 살펴보면 ‘리스크 관리 3선 방어개념’(3 lines of defense)에 의거 각 부서의 리스크 관리 책임자 및 리스크 담당자, 리스크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리스크관리그룹 및 내부감사 부서가 3중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선 방어의 개념은 1선은 현장의 각 부서관리 책임자, 2선은 리스크 관리그룹, 3선은 독립적인 내부감사의 활동을 의미한다. 리스크 관리 인력과 예산이 제약된 중소기업이나 비영리조직 등은 초기에는 우선 리스크 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임명하여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리스크 관리 업무의 확대에 따라 관련 업무와 조직을 분장해 나가는 것이 보다 실용적일 것이다.

증권계좌 계정과목

Q 본원은 모 증권사 계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배당금이 입금 되어서 회계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 계좌를 보통예금 처리 해도 되나요?

해당 계좌에 예탁금 이용료라고 소액 입금되었는데 이 금액은 잡이익 처리 하면 되나요?

A 금융상품 등에 가입하지 않은 단순계좌라면 보통예금으로 처리해도 되며, 예탁금 이용료 입금액 잡이익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입 / 매출 부가세 신고 시점 차이에 대한 문의

Q 매입 부가세와 매출 부가세의 신고 시점이 월단위 정도로 차이가 발생하는 내역이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A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해 공급시기에 발급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하시면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를 임의로 조정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면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돼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회계프로그램 제품은 반드시 자산등록해야하나요?

Q 회계 프로그램을 구입 후, 5년 비품으로 보고 감가상각하며 쓰고있었는데, 갑자기 그 제품이 단종된다고 계속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업데이트가 안된다고 하여 사실 상 강제로 다른 제품으로 추가비용을 들여 변경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할인 등 혜택이 있어 약 500여 만원이 추가로 들거같은데, 꼭 자산등록을 해야할까요?

1. 자산등록을 해야한다면

- 기존 단종된 제품은 유형자산처분손실 처리하고, 새 제품은 할인 등은 무시하고 추가금액 500

여 만원으로 등록하면 될까요?

- 할인혜택을 주기도 하니 기존 제품은 손실처리 안하고, 그냥 5년 계속 감가상각비 처리해도 될까요?
- 새 제품 상세 견적에 라이선스 300만원 + 교육비 200만원 으로 되어있다면, 교육비는 자산등록을 안하고 교육훈련비로 비용처리하는것이 맞을까요?

2. 자산등록을 안해도 된다면

- 그냥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500여 만원을 자산등록하지않고 모두 비용 처리 해 버리면 안될까요?

(EX - 라이선스 300만원 = 지급수수료 300만원, 교육비 200만원 = 교육훈련비 200만원)

A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유무형의 자산은 자산으로 등록하셔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 기존자산은 그대로 두고 추가금액에 대해 기존자산 합산이나 새로운 자산 취득으로 반영하시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소비자 보상금 지급 시 증빙 문의

Q 제품 이상에 따른 클레임으로 고객에게 보상금 지급한 후
업체 출금표 발행으로 해당 금액만큼 회수하려 합니다.
이 때 대금 지급 회계처리에 따른 증빙은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할까요?

A 제품 하자 등에 따른 손해보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성 금액이 아니므로 별도의 법정증빙을 입수할 수 없으므로 손해보상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입금증이나 송금명세서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해외여행은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상담실 백종훈 차장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의미하는데, 법인의 사업(업무)과 관련이 있고, 일반적이고 합리적으로 용인되는 금액의 한도내이며,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지출 또는 비용)라는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법인이 지급하는 임원이나 직원의 해외여행 관련 여비도 무조건적으로 손금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해외여행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면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비용을 계산하고 있는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업무관련성의 판정

임직원의 해외여행에 따른 경비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여행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인지의 판단은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하게 된다.

하지만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이나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동업자단체·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업무수행상 필요한 여행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해외여행이라도 여행사 등의 패키지 상품 등을 이용해 다녀온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서이46012-10582, 2001. 11. 20

법인이 임직원의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패키지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법인46012-2268, 2000. 11. 16 및 부가46015-1296, 2000. 6. 2)을 참고하기 바람. 다만,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패키지상품)을 이용한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물론 해외여행을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 다녀왔더라도, 그 여행기간 중의 여행지, 수행업무 등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이때에

도 왕복 교통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여비 및 업무성과 관련 포상여행은 손금불산입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해외출장비나 해외연수비 등의 해외여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회사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손금불산입이 원칙이다.

또한 업무성과가 우수한 직원이나 부서에게 포상차원에서 해외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업무와 관련된 여행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비용을 법인의 비용이 아닌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

즉, 특정 해외여행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의 여부는 여행을 떠나기 전의 해외여행과 관련된 업무관련성이 아닌 실제 여행지에서의 업무가 수행되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우수자에게 포상한 해외여행경비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여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 서아-45, 2005. 01. 06

업무실적 우수 근로자에 대한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22(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해외여행에 따른 지출증빙의 수취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출증빙의 경우 항공료는 항공권이면 되고, 숙박요금이나 식대 등은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이므로 지출증빙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수취 의무가 없지만, 현지에서 받은 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된다.

하지만 여행사 등을 통해 해외여행을 진행하는 경우 여행사에서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하며, 여행사가 교통비·숙박비 등의 소요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나머지 비용은 직접 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한다.

♣ 재소비-34, 2006.1.11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절세 상품

상품	가입대상	특징
개인형 퇴직연금(IRP)	소득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	최대 148만5000원 세액공제
연금저축	누구나 가입 가능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자	청약 자격도 얻고 납입액의 40%인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19~34세 출금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청년	납입액 6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	소득에 따라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벤처투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기업	투자금액에 따라 3년 이상 유지 시 30~100% 공제



OECD 주요국의 상속 관련 과세 체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국가	유산취득세 방식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20개국
	유산세 방식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
자본이득세 부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	4개국
추가 소득세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3개국
비과세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	7개국



상속세 신고 주요 절차

시기	주요 절차
상속개시일 시점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수취
상속개시일 1개월 이내	사망신고 및 안심 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 신청
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	상속재산 시가평가 확정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세 신고 및 납부- 피상속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피상속인 사업자등록 정정/폐업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재산분할(등기) 및 분할신고- 상속세 결정기한



주요국 반도체 세제혜택 지원 현황

미국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반도체 장비·제조시설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첨단기술 도입·적용 기업에 대해 최대 10년간 50~100% 법인세 면제• R&D 비용의 200%까지 소득공제• 집적회로(IC) 생산설비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 면제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해 최대 40% 세액공제•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10년간 법인세 최대 20% 감면
대만	R&D 투자액의 25%, 설비 투자액의 5% 세액공제(법인세의 30% 한도)



아무리 진부한 대답이라도 하라

회의에서 발언을 요청받으면 한참 머뭇거리다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거나 “다른 분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자기 생각이라곤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지름길이다.

어떤 자리에서든 말할 기회가 생기면 아무리 진부한 의견이라도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무 의견도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제 나름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시간을 번 다음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자기 생각을 빨리 정리해서 말하면 된다.

최신판례예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Ⅰ 질 의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Ⅰ 회 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재산-19, 2024.01.31

Ⅰ 질 의

- A토지 1978.6.24.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편입
- '18.2월 신청인은 A토지 매수 후 4년 이상 경작
- '23.12월 상기 농지 중 일부가 분할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됨
- 청구인은 이후 수용금액으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예정

질의

- 조특법 70 농지대토 감면규정 개정('10.1.1.) 전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4년 이상 자경 후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조특법 70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Ⅰ 회 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해당 농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건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사전법규부가-256, 2024.04.25

■ 질 의

- ***** 주식회사는 주택건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분양계약 시 수분양자들(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과 공동주택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 등 옵션 계약서를 작성하고
 - 수분양자들로부터 공동주택 분양대금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 등 옵션 공사 용역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수취함

질의

- 주택건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 시 수분양자들(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 회 신

주택건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0호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직접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 지급시 해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과세 대상소득 아님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인 임원에게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국조-33, 2024.04.30

■ 질 의

- 질의법인은 미국인 A와 R&D 담당 부사장 겸 사내 등기 임원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현지에서 고객사 영업 및 프로젝트개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A는 비거주자(미국 거주자)로 미국에서만 질의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은 있지만 이사회 참석을 하지 않으며, 질의법인은 이사회 참석에 따른 별도 보수 지급규정 및 계획도 없음

질의

- 질의법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임원에게 미국에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원천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 회 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인 임원에게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미술품으로 상속세 물납, 첫 사례 나왔다... 이만일 일출도 등 4점 허용

문화유산 및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첫 사례가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물납 신청된 10점의 작품 가운데 이만일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집합(Aggregation)08-제이유(JU)072블루(BLUE)'(2008), 쟁판즈(Zeng Fanzhi)의 '초상화(Portrait)'(2007) 2점이 물납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술품 물납제도는 2023년 상속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가운데 현금 비중이 작을 때 상속세 대신 미술품 납부를 허용한다.

그러나 아무 미술품이나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문화적으로 국가가 소장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미술품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납세자가 세무서에 신청하면, 세무서는 문체부에 통보하고, 문체부는 물납심의위를 열어 의결하면, 다시 세무서에 의결 결과를 통보해 물납처리를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미술업계에선 감정평가 및 경매시장 활성화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납된 미술품 등은 8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 수납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정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루어 낸 결과"라며 "제도 시행에서 발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는 2020년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상속세 마련을 이유로 보물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은 것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이재용 삼성 회장 상속세 과정에서 '이건희 컬렉션' 기증 후 상속세 물납 허용 목소리가 세졌고, 미술시장에서도 새로운 먹거리로 기대감을 높였다. 2021년 말 상속세 미술품 물납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됐다.

"수십억대 고급주택, 'A4 한장' 면적 차로 취득세 중과 면피"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기준이 불합리해 수십억원이 넘는 고급주택들이 취득세 중과를 면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위 20위 목록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중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받는 고급주택이 몇군데 나 될 거 같으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가) 160억부터 60억까지인데, 딱 (상위) 두 군대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18군데(곳)는 중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고급주택이 0.28㎡, 0.07㎡, A4용지 한 장 크기로 고급주택 중과를 피해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가 중과되는 공동주택 기준은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고,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경우다. 복층은 연면적이 274㎡를 넘는 경우 해당한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 취득 시 중과세율(8%) 적용된다.

최고급 공동주택들은 공시가격이 최소 수십억원에 달하지만, 연면적 기준이 고급주택 분류 기준에 불과 A4용지 한 장 크기 정도가 모자라면서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취득세 중과기준은) 건축물 가액을 따져야 하는데 면적만 따져서 조세 불평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행안부도 용역을 맡겼고, 정책제언에서도 심각한 조세불평등을 보이고 있기에 면적 기준을 없애고,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초과 누진세율을 과세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시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지적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게 1975년에, 오래전에 마련된 제도인데 그 공백을 많이 이용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지적하신 대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법인세 공제감면 주요 사례

- 국세청, 2024. 10

사례 1 고용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 컨설팅 신청 내용

수도권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인 (주)국세는 2023년 고용이 증가하였으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상시근로자 수 계산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및 그 금액에 대하여 컨설팅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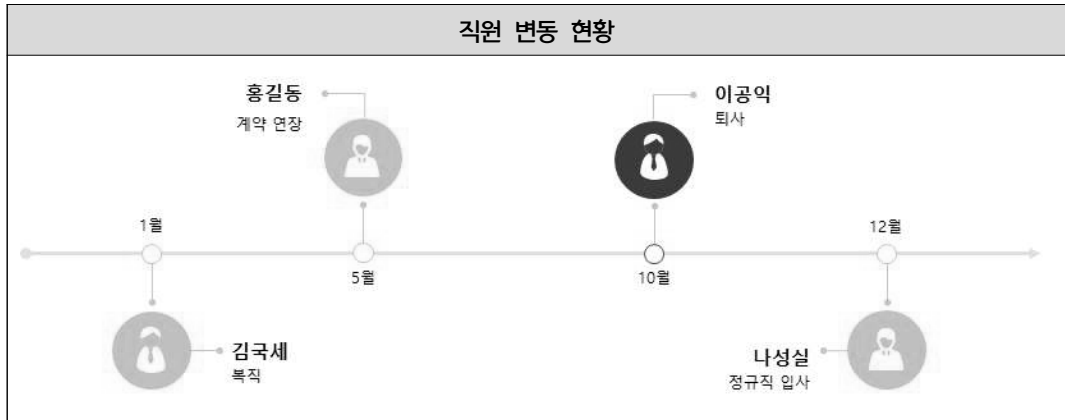
○ (주)국세 상시근로자 수

(단위 : 명)

구분	2022년	2023년	'22년 근로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2	컨설팅 신청	AA, BB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	1		이공익
전체 상시근로자 수	3		-

○ 2023년 고용 변동 현황

직원명	청년 여부	특수관계여부	비고
AA	여	부	-
BB	여	부	-
이공익	부	부	10월 31일 퇴사
홍길동	부	부	계약직('23.1~'23.4), 계약 연장('23.5~'24.2)
김국세	부	부	1월 복직(6개월 육아휴직자)
나성실	여	여	12월 정규직 입사



□ 컨설팅 결과

○ 상시근로자 수 계산(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 2명

- 나성실은 특수관계자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단위 : 명)

직원명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AA	12	1	1	1	1	1	1	1	1	1	1	1	1
BB	12	1	1	1	1	1	1	1	1	1	1	1	1
나성실	-	-	-	-	-	-	-	-	-	-	-	-	-

⇒ 상시근로자 수 계산 : $(12+12+0) \div 12 = 2$

-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 : 2.5명

- 이공익은 10월 31일까지 근무하여 1~10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 김국세는 (주)국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6개월의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으며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육아휴직 복귀자에 해당
- 홍길동은 당초 근로계약이 1년 미만으로 1~4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고, 계약연장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계약 연장한 달(5월)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단위 : 명)

직원명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공익	10	1	1	1	1	1	1	1	1	1	1	-	-
김국세	12	1	1	1	1	1	1	1	1	1	1	1	1
홍길동	8	-	-	-	-	1	1	1	1	1	1	1	1

⇒ 상시근로자 수 계산 : $(10+12+8) \div 12 = 2.5$

* (주)국세 상시근로자 수

(단위 : 명)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2	2	-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	1	2.5	+1.5
전체 상시근로자 수	3	4.5	+1.5

○ 고용 증대 관련 세액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가능세액

- 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제 가능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3명)보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 (4.5명)가 증가하여 공제 가능

- 공제가능세액(①+②+③) : 25,750,000원

① 청년등 :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450만원(수도권 내)

⇒ 0명 × 1,450만원 = 0원

② 청년 외 : 청년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850만원(수도권 내)

⇒ 1.5명 × 850만원 = 12,750,000원

③ 추가공제 : 정규직 근로자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인원 수 × 1,300만원

⇒ 1명 × 1,300만원 = 13,000,000원

- 납부할 농어촌특별세 : 5,150,000원

• 감면을 받는 법인세 × 20%

⇒ 25,750,000원 × 20% = 5,150,000원

○ 추가 안내 사항

- 공제받은 이후 2년 동안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 하지 않아야 하며,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 부해야 함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 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1 항)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통합고용세 액공제’ 또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 액공제*’ 중 유리한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함

*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적용 가능



*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제19936호, 2023.12.31. 일부개정)

-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구분	중소기업(3년간)		중견기업(3년간)	일반기업(2년간)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청년등	1,450만원	1,550만원	800만원	400만원
청년등 외	850만원	950만원	450만원	-

-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④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비정규직 근로자)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육아휴직 복귀자가 복직하는 경우 전환 또는 복직 원인에 다음의 금액을 곱하여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1,300만원	9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세액공제】(제33264호, 2023.02.28. 일부개정)

- ①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②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계산식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지원요건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㉔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제33264호, 2023.02.28. 일부개정)

㉔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법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9936호, 2023.12.31. 일부개정)

구분	중소기업(3년간)		중견기업(3년간)	일반기업(2년간)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청년등	1,1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청년등 외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19936호, 2023.12.31. 일부개정)

청년등	고용증가인원 ×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 × 100분의 100
청년등 외	고용증가인원 ×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 × 100분의 50 (신성장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사례 2 기계장치 등을 구입한 경우(일반) (통합투자세액공제)

□ 컨설팅 신청 내용

중소기업 (주)세무(제조업)는 토지 및 기계장치 구입비용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컨설팅 신청

○ (주)세무 과세연도별 투자금액

(단위 : 백만원)

과세연도	합계	토지	기계장치	기계장치(중고품)
2021년	-	투자금액 없음		
2022년	-			
2023년	400	200	100	100

□ 컨설팅 결과

○ 공제 가능 요건 검토 : 일부 공제가능

- (업종)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임대·공급업이 아니므로 공제 가능한 업종에 해당
 - (공제대상 자산)
 - 토지는 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므로 공제대상 아님
 - 기계장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공제대상에 해당
 - 기계장치 중 중고품*으로 구입한 자산은 제외되므로 공제대상 아님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 (주)중소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 일부 적용 가능

구분		요건 충족 여부
① 업종		여
② 공제대상 자산	토지	부
	기계장치	여
	기계장치(중고품)	부

○ 공제금액 계산(①+②) : 12,000,000원

-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투자금액 : 100백만원(기계장치)

① 기본공제 금액 : 투자한 금액 × 공제 비율

$$\Rightarrow 100,000,000\text{원} \times 12\% = 12,000,000\text{원}$$

② 추가공제 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 × 공제 비율

⇒ 0원 × 10% = 0원

- 납부할 농어촌특별세 : 2,400,000원

• 감면을 받는 법인세 × 20%

⇒ 12,000,000원 × 20% = 2,400,000원

○ 추가 안내 사항

- 투자완료일부터 2년(건축물 또는 구축물 5년) 내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과 중복 적용할 수 없으므로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
-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제19936호, 2023.12.31. 일부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연구·시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운수업 경영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2. 공제금액(가+나)

가. 기본공제 금액

기업 규모	투자 구분	공제 비율	임시 투자 세액공제 비율 (2023년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	일반	10%	12%
	신성장사업화 시설	12%	18%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25%	25%



중견기업	일반	5%	7%
	신성장사업화 시설	6%	10%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15%	15%
일반기업	일반	1%	3%
	신성장사업화 시설	3%	6%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15%	15%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아래 공제율을 곱한 금액

투자 구분	공제 비율	임시 투자 세액공제 비율 (2023년 투자한 경우)	한도
일반적인 경우	3%	10%	기본공제 금액의 2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선박 및 항공기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그 구축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제33264호, 2023.02.28. 일부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제19936호, 2023.12.31. 일부개정)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중략)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중략)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사례 3

기계장치 등을 구입한 경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 공장) (통합투자세액공제)

□ 컨설팅 신청 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주)중소(제조업)는 공장 기계장치 등 구입비용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컨설팅 신청

○ (주)중소 과세연도별 투자금액

(단위 : 백만원)

과세연도	합계	기계·시설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2021년	-	투자금액 없음		
2022년	-			
2023년	350	200	50	100

□ 컨설팅 결과

○ 공제 가능 요건 검토 : 공제가능

- (업종)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임대·공급업이 아니므로 공제 가능한 업종에 해당
- (공제대상 자산)
 - 기계·시설장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공제대상에 해당
 - 차량운반구 및 비품은 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여 공제대상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 (주)중소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인 사업장에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여 감면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다음의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 공장인 사업장 :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공장 외 사업장 :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주)중소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 일부 적용 가능

구분		요건 충족 여부
① 업종		여
② 공제대상 자산	기계·시설장치	여
	차량운반구	부
	비품	부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조세감면 배제		부(조세감면 배제 사유 아님)

○ 공제금액 계산(①+②) : 24,000,000원

-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투자금액 : 200백만원(기계·시설장치)

① 기본공제 금액 : 투자한 금액 × 공제 비율

⇒ 200,000,000원 × 12% = 24,000,000원

② 추가공제 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 × 공제 비율

⇒ 0원 × 10% = 0원

- 납부할 농어촌특별세 : 4,800,000원

• 감면을 받는 법인세 × 20%

⇒ 24,000,000원 × 20% = 4,800,000원

○ 추가 안내 사항

- 투자완료일부터 2년(건축물 또는 구축물 5년) 내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과 중복 적용할 수 없으므로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
-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제19936호, 2023.12.31. 일부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연구·시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운수업 경영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2. 공제금액(가+나)

가. 기본공제 금액

기업 규모	투자 구분	공제 비율	임시 투자 세액공제 비율 (2023년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	일반	10%	12%
	신성장사업화 시설	12%	18%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25%	25%
중견기업	일반	5%	7%
	신성장사업화 시설	6%	10%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15%	15%
일반기업	일반	1%	3%
	신성장사업화 시설	3%	6%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15%	15%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아래 공제율을 곱한 금액

투자 구분	공제 비율	임시 투자 세액공제 비율 (2023년 투자한 경우)	한도
일반적인 경우	3%	10%	기본공제 금액의 2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선박 및 항공기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그 구축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제33264호, 2023.02.28. 일부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제19936호, 2023.12.31. 일부개정)

-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제33264호, 2023.02.28. 일부개정)

- ①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사례 4

기계장치 등을 구입한 경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 공장 외)
(통합투자세액공제)

□ 컨설팅 신청 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주)공익(도매업)는 기계장치 등 구입비용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컨설팅 신청

○ (주)공익 과세연도별 투자금액

(단위 : 백만원)

과세연도	합계	기계·시설장치	차량운반구(승용차)	비품
2021년	10	10	-	-
2022년	200	90	100	10
2023년	300	200	-	100

□ 컨설팅 결과

○ 공제 가능 요건 검토 : 공제 불가능

- (업종)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임대·공급업이 아니므로 공제 가능한 업종에 해당
- (공제대상 자산)
 - 기계·시설장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공제대상에 해당
 - 차량운반구(승용차) 및 비품은 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여 공제대상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 (주)공익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외 사업장에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여 감면배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 다음의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 공장인 사업장 :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공장 외 사업장 :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주)중소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 적용 불가능

구분		요건 충족 여부
① 업종		여
② 공제대상 자산	기계·시설장치	여
	차량운반구(승용차)	부
	비품	부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조세감면 배제		부(조세감면 배제 사유 해당)

○ 공제금액 계산 : 0원

- 세액공제 적용 가능 투자금액 : 해당없음

*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제19936호, 2023.12.31. 일부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연구·시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운수업 경영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2. 공제금액(가+나)

가. 기본공제 금액

기업 규모	투자 구분	공제 비율	임시 투자 세액공제 비율 (2023년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	일반	10%	12%
	신성장사업화 시설	12%	18%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25%	25%
중견기업	일반	5%	7%
	신성장사업화 시설	6%	10%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15%	15%
일반기업	일반	1%	3%
	신성장사업화 시설	3%	6%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15%	15%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아래 공제율을 곱한 금액

투자 구분	공제 비율	임시 투자 세액공제 비율 (2023년 투자한 경우)	한도
일반적인 경우	3%	10%	기본공제 금액의 2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선박 및 항공기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그 건축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제33264호, 2023.02.28. 일부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제19936호, 2023.12.31. 일부개정)

-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제33264호, 2023.02.28. 일부개정)

- ①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사례 5

겸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컨설팅 신청 내용

수도권 외 소재하는 중소기업 (주)화물(화물운송업 · 행정서비스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컨설팅 신청

○ (주)화물 업종별 수입금액

(단위 : 백만원)

업종별	수입금액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비고
화물운송업	400	15	20	1.8	구분경리
행정서비스업	100	5			

* (주)화물의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음



□ 컨설팅 결과

○ 공제·감면 가능 요건 검토 : 일부공제 가능

- (업종)

- 화물운송업은 감면 업종에 해당(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처목)
- 행정서비스업(세무·보험·차량관리)은 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 감면 가능 업종과 그 외 사업이 구분 경리되어 있으므로, 감면 가능업종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 (감면비율)

- (주)화물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은 화물운송업으로 매출액 계산을 위한 주된 사업은 화물 운송업임
-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므로, (주)화물의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에 해당
-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므로 감면비율은 100분의 30

* 주된 사업의 평균매출액등 소기업 규모 기준

- 운수 및 창고업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주)화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구분	적용 가능 여부
화물운송업	여
행정서비스업(세무·보험·차량관리 등)	부

○ 감면세액 계산 : 405,000원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감면비율

$$\Rightarrow 1,800,000\text{원} \times (15,000,000\text{원} \div 20,000,000\text{원}) \times 30\% = 405,000\text{원}$$

- 감면한도 = Min(1억원, 1억원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백만원)

$$\Rightarrow \text{Min}(1\text{억원}, 1\text{억원} - 0\text{명} \times 5\text{백만원}) = 1\text{억원}$$

○ 추가 안내 사항

-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해야 적용 가능
- 과세표준금액에 공제금액(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감면대상 소득은 다음의 금액을 차감
 - 공제금액이 감면대상소득에서 직접 발생한 경우 : 전액 차감
 - 공제금액이 감면대상소득에서 발생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차감

-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와 중복 적용할 수 없으므로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

※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19936호, 2023.12.31. 일부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가. 작물재배업
- 나. 축산업
- 다. 어업
- 라. 광업
- 마. 제조업
- 바.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 사. 건설업
- 아. 도매 및 소매업
-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차. 출판업
- 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 타. 방송업
- 파. 전기통신업
-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 너. 연구개발업
- 더. 광고업
- 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머. 포장 및 충전업
- 버. 전문디자인업
-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 저. 엔지니어링사업
- 쳐. 물류산업
- 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산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루. 임업
- 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부.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감면 비율

기업 규모	사업장 소재지	감면 업종	감면 비율
소기업	수도권 내	제조업 등	20%
		도·소매, 의료업	10%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30%
		도·소매, 의료업	10%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5%
	알뜰주유소		20%
	수도권 내	알뜰주유소	10%
중기업	수도권 외	제조업 등	15%
		도·소매, 의료업	5%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5%
		알뜰주유소	15%

3. 감면 한도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제19936호, 2023.12.31. 일부개정)

㉔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중략)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중략)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0월 11일 (금)	10월 14일 (월)	10월 15일 (화)	10월 16일 (수)	10월 17일 (목)
미 달 러 (USD)	1349.40	1348.60	1354.90	1360.40	1363.70
일 본 엔 (JPY)	907.74	903.31	904.62	911.22	911.29
영 국 파 운 드 (GBP)	1762.18	1760.40	1770.04	1777.57	1771.04
캐 나 다 달 러 (CAD)	981.85	978.77	981.85	987.34	991.24
홍 콩 달 러 (HKD)	173.67	173.57	174.52	175.13	175.50
위 안 화 (CNH)	190.78	190.30	191.51	191.34	191.22
유 로 화 (EUR)	1475.50	1473.75	1477.99	1481.14	1480.64
호 주 달 러 (AUD)	909.70	908.75	911.37	910.45	908.29
싱 가 폴 달 러 (SGD)	1033.39	1032.18	1035.66	1038.55	1037.98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14.44	314.54	315.46	315.67	317.51

비거주자 원천징수

- 국세청, 2024. 10

1 비거주자 판정

◎ 비거주자

- 비거주자 개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함
 -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 거주기간의 계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함

2 과세대상 소득

●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

- 국내세법은 비거주자 등의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음
 - 열거하지 아니한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해 소득에 대해 과세 불가능)
 - ※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 5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고 있음
 - 국내세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종류별로 구분·열거하는 이유는 세율이나 과세방법 등에서 취급을 달리하기 때문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 (소득세법상)
소득세법 제119조				
1호	이자소득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국내사업장 미등록시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14)
2호	배당소득			20
3호	부동산소득			—
4호	선박등 임대소득			2
5호	사업소득			2
10호	사용료소득			20
11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Min(양도가액×10% , 양도차익×20%)
12호	기타소득			20
7호	근로소득			거주자와 동일
8호의2	연금소득			
6호	인적용역소득		분리과세 (종합 과세 선택가능)	20
8호	퇴직소득	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9호	양도소득	거주자와 동일 (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다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Min(양도가액×10% , 양도차익×20%)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포함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와세이자소득, 분리와세배당소득, 분리와세기타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와세·원천징수함
-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 5(원천징수절차특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예외로 함
- 건축·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 혹은 소득세법 제119조 6호에 따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 : 지급액의 100분의 10을 원천징수
 -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 양도소득 :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 신고납부
 - 다만, 개인 양수자는 원천징수의무 면제
-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본인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 가능(소득세법 제121조 5항)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법인세법상)
법인세법 제93조				
1호	이자소득	종합과세, 법인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14)
2호	배당소득			20
4호	선박등 임대소득			2
5호	사업소득			2
8호	사용료소득			20
9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Min(양도가액×1 0%, 양도차익×20%)
10호	기타소득		20	
6호	인적용역소득		분리과세 (신고·납부 가능)	20

7호	양도소득	종합과세, 법인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법인세 신고·납부(다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Min(양도가액×1 0%, 양도차익×20%)
3호	부동산소득		법인세 신고·납부	-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
-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도 다음의 경우는 원천징수 함(예납적 원천징수)
 - 이자소득, 집합투자기구조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
 -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경우는 원천징수 제외)
-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다만, 법인세법 제98조의5(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 신고·납부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함
 - 개인 양수자는 원천징수의무 면제(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신고납부 가능

3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의무자
 -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법인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56조)
 -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거주자·외국법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 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법인세)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07.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폐지
-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즉 주식을 양수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

4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원천징수의무자	납 세 지
거주자	①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비거주자	② 그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

	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
법인	③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④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 다만, 법인이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 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 등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할 수 있음
비거주자의 원천징수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①~④까지의 규정에 정한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9호 나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
	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5 원천징수 시기

● 원천징수시기

-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을 하는 때
 -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6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



-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
- 지급자 세금부담의 경우
 - 지급자가 비거주자 등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역산하여 산출(계약서상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순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지급자 세금부담조건과 동일)

$$\text{과세표준} = \text{지급금액} \times \frac{1}{1 - \text{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세율에는 소득(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모두 포함

-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제한세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의 세율과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로 배분하여 소득세 등의 세율 산출

$$\text{소득세(법인세) 세율} = \text{제한세율} \times \frac{1}{1 + 0.1}$$

※ 지방소득세율이 소득세(법인세)의 10%인 경우임

【사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얼마인가?(제한세율 10%로 조세조약 체결, 지급자 세 부담 조건, 적용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begin{aligned} \text{과세표준} &: 100,000 \times \frac{1}{1 - \text{원천징수세율}^*} \\ &= 100,000 \times \frac{1}{(1 - 0.11)} = \frac{100,000}{0.89} = 112,359 \end{aligned}$$

* 원천징수세율 = 제한세율(0.1) + 지방소득세율(0.1 × 10%) = 0.11

원천징수세액 : 100,000	법인세	112,359 × 0.1 =	11,236
	지방소득세	11,236 × 0.1 =	1,123
	합계		12,359

- 대부분의 조세조약의 경우 지방세인 지방소득(주민)세가 조세조약 적용대상 조세에 포함되나, 일부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원천징수

*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

- 유가증권 양도소득
 -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로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함

-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와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간의 거래
 - ② ①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함

7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세율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는 없음

- 원천징수 세율
 -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 적용
 -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 제한세율의 개념
 -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하여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 함
- 제한세율 특징
 - 총액(Gross Amount)에 대하여 적용. 따라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순소득(Net Income)이 아닌 수입금액(지급총액)임
 - 당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
 -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세율
 -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의미는 원천지국에게 제한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원천지국이 자국의 세법상 세율로 과세하되 당해 조약에서 규정된 세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 직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
 - 투자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 정보와 제한세율의 적정 여부를 확



인한 후 제한세율을 적용

-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3년간 유효)
- 연금, 기금 등 다음의 단체는 하나의 실질귀속자(1거주자)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
 - ① 계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금
 - ② 계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 ③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 간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
 -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세율을 적용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제한세율 적용절차 간소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공모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에게 제출
※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 국외사모투자기구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서를 작성
- 제한세율 미적용 사유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제출을 생략하고 있으므로 적용 제외)
- 경정청구 관련 사항
 -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세무서장은 6개월 이내에 경정을 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
 - * 경정청구 첨부서류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거주자증명서
- 제한세율 적용 배제
 - 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
 -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 조세조약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8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함
-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출자
 -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제출기한
 -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제출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 ※ 다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외국투



자가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 국내원천 이자, 배당, 선박·항공기등 임대,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 ※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법인세법 제73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임
- 국내원천소득 부동산소득(소득세법 제119조 3호, 법인세법 제93조 3호)
- 국내원천 사업 및 인적용역소득
 - ※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 되는 소득은 지급 명세서 제출대상임
-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등의 당첨금품 등에 해당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56조의2, 법인세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 ※ 다만, 국내원천 양도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임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 국세청, 2024. 10

1 개요

퇴직연금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꾸어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24.10.31. 개시된다.

- ◆ 그간 '24.10.15. 조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퇴직연금사업자별 시스템 구축(8월중 완료) 후 테스트를 진행하여 왔으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업계 공통)에 따라 당초 발표한 일정(10월중*)에 서비스를 개시

* (참고) 정부 「연금개혁 추진계획」(9.4) 중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방안으로 “실물이전 시스템 구축('24.10~)” 포함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타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현금화)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계약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실물이전 서비스 제공 사업자 >

- ◆ 퇴직연금 관련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이 아닌,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등 퇴직연금사업자와 상품제공기관의 자발적인 협조에 기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총 44개 실물이전 대상 퇴직연금사업자 중 37개사(실물이전 대상 적립금의 94.2% 차지)가 10.31. 개시



※ 실물이전 서비스 개통이 어려운 일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서비스 개시 지연사유 및 개시 예정일자를 각 퇴직연금 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에 안내할 예정

* '24.10.11일 현재 부산·경남은행, 삼성생명, 하나증권(이상 차세대 시스템 구축), 광주·iM은행, iM증권(이상 전산시스템 구축·테스트 지연) 등 7개사는 추후 서비스 개시 예정 ('붙임 1' 참조)

2

실물이전 신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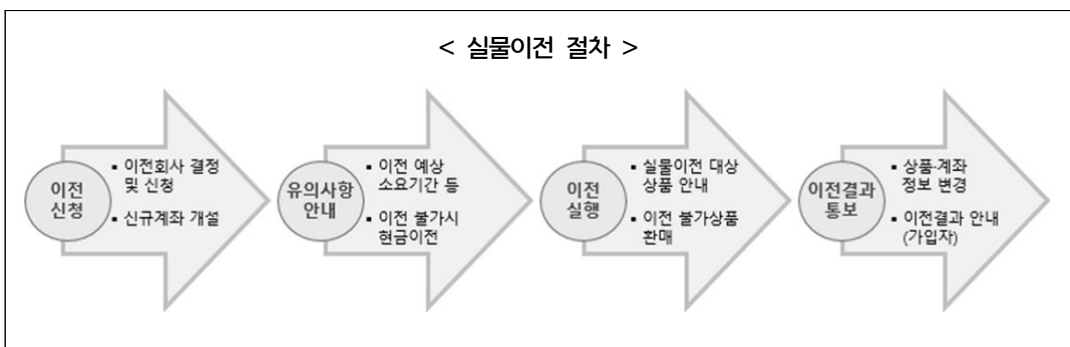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 단,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하여 이관회사에서도 이전신청 가능

가입자의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가입자에게 안내*하여 가입자의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거친 후,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SMS,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 가입자가 既 투자한 상품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및 동일한 상품 미취급시 처리방안(현금이전) 등

< 실물이전 절차 >



3 실물이전 범위 및 대상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 ELB·DLB 등), 공모펀드,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대부분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실물이전은 동일한 제도 내(DB ↔ DB, DC ↔ DC, IRP ↔ IRP)에서 이전 가능하고,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특성,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자는 “실물이전 대상제도 및 상품 범위(‘붙임 2’ 참조)”를 참고하여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디폴트옵션 상품(전체 적립금의 5.7%),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이 보험계약 형태인 경우(16.5%), 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한 연번들형 계약(7.3%) 등

또한, 가입자는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line-up)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가입자가 운용하는 다양한 상품 중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실물이전 대상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기존과 같이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4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은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기능”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오픈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DC에서 IRP로의 실물 이전 등 금번 이전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도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하는 등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실물이전 대상제도 및 상품 범위
----	-------------------

【이전 범위】

- ☐ 동일한 제도 내(DB ↔ DB, DC ↔ DC, IRP ↔ IRP)에서만 이전 가능
 - DB 간, DC 간 이전의 경우 해당 기업이 이·수관회사 모두와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



결하고 있어야 실물 이전 가능

- 개인이 투자하는 DC와 개인형 IRP는 적립금의 전부 이전만 가능하므로 계약 내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는 경우 현금화하여 이전 필요

【이전 대상】

- 특정금전신탁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신탁제공형), ELB·DLB 등), 공모 펀드(MMF 제외), ETF 등은 실물이전 가능
 - 다만,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관회사와 수관회사에서 동일 상품을 제공(라인업)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

【제외 대상】

- 일부 상품은 계약 형태, 상품 특성 등에 따라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정 상황 발생 등에 따른 일부 상품**도 실물이전이 불가
 - * (계약 형태)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 언변들형 계약(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
 - * (상품 특성)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체 상품(디폴트옵션), 지분증권, 리츠, 사모펀드, ELF, 파생 결합증권, RP, MMF, 종금사 발행어음
 - ** 상품제공수수료 부과상품(단, 수관회사의 판단으로 실물이전 가능여부 선택 가능), 임의해지 대상 소규모펀드,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 압류 및 질권 설정 상품,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환매불가 펀드 등